

영남 2개·호남 1개 '5+2 광역경제권' 국회 통과

## 영·호남 격차 고착화 우려

호남 민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의 경제적 불균형을 제도화, 고착화할 우려가 제기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호남권 미래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남 2개, 호남 1개의 '5+2 광역경제권' 확정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2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동철, 주승용, 김재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등을 통해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확정에 나설 예정이며, 영남 2개(대경권·동남권), 호남 1개(호남권)의 '5+2 광역경제권'을 제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호남지역 정치권과 광역단체장들이 영호남의 경제적 불균형 등 광역경제권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조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5+2 광역경제권'을 명문화한다면 영호남의 경제적 불균형이 고착화될 전망이다.

광역경제권이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 배정되면서 예산 배정과 신규 사업 등에서 호남보다는 영남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9월 광역경제권 혁신 산업 및 사업을 영남에 편중되게 배정, 호남 광역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에 야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 확장 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광역경제권이 5+2체제로 설정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이 분회의를 통과한데는 이를 방지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에 수정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주호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 회동을 갖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전북을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분리하는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여야가 공동으로 요구키로 합의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설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국회와 사전협의기로 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원만한 협상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주공·도공 통합법 의결

### 민주 "원천무효" 반발

국회 국토해양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끝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안은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

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인은 또 공사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는 또 이날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폐지 토록 한 '주택법'을 의사일정에 포함, 상정시키려 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식 위원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대한 추가 토론 시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본회의가 있어서 전체회의를 거부했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불법이고,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절차의 문제점이 있어 오늘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여수·완도·고흥서도 보조금 비리

### 복지급여 횡령 공무원 4명 적발

해남군에 이어 여수와 완도 등 전남지역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사실이 또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여수시와 완도·고흥·서울시 노원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이 복지급여 1억 5천 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중 여수시·완도군·서울노원구 소속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횡령 약수가 적은 고흥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7급 A(여·58)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63차례에 걸쳐 기초 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2천 600만원을 횡령해오다 적발됐다. A씨는 본인과 가족, 제3자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통장 13개에 횡령한 돈을 입금한

뒤 이를 자신의 빚을 갚거나 친정어머니 생활비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사망자 가족에게 '장수(長壽) 수당' 환수를 광계로 사망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하거나, 생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의 면사무소 사회복지 7급 B(여·36)씨는 2001년 11월부터 1년간 수급자 7명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 470만여만원을 2천 500만원으로 부풀린 뒤 차와 2천만원을 자신의 봉급계좌로 빼돌려 친정 부모 생활비 용도로 사용했다.

고흥군의 읍사무소 7급 C(43)씨는 2003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수급자 사망, 계좌오류 등으로 지급이 안 된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수당 등 150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최권일기자 cki@



LIRI KIDS

면음, 소방, 사랑으로 미움 따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학부 062-605-11114 대학원 605-1115